

중기부 장관
기자간담회

“**현** 장의 **문** 제에 **중** 기부가 **답** 합니다.”

「 **중소기업 도약 전략** 」

2024. 4. 29.



중소벤처기업부

목 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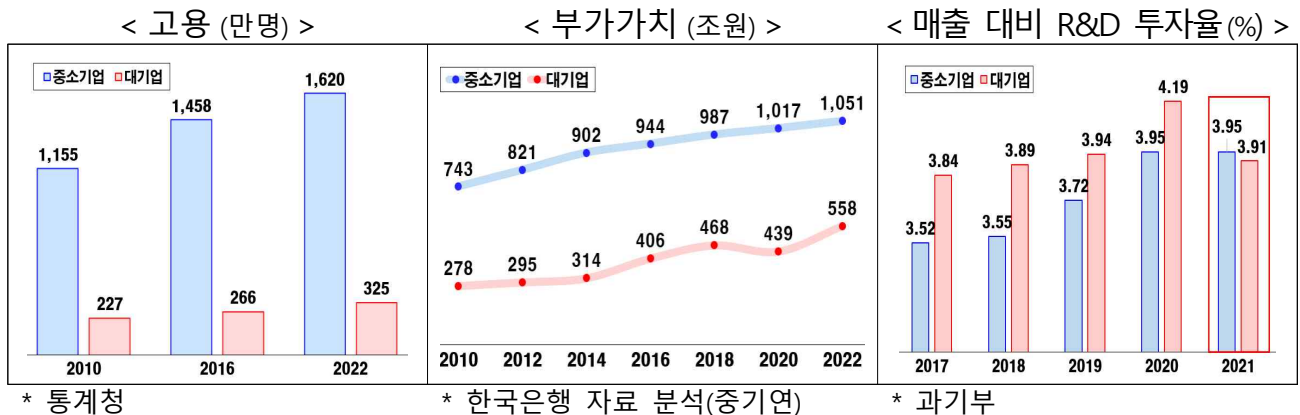
I. 추진배경	1
II. 진단 및 평가	3
III. 정책방향	7
IV. 주요 추진과제	9
1. [전략 1] 혁신성장	9
2. [전략 2] 지속성장	13
3. [전략 3] 함께성장	16
4. [전략 4] 글로벌 도약	19
5. [전략 5] 똑똑한 지원	22
V. 향후계획	24

I. 추진배경 : 성장 변곡점에 놓인 중소기업

□ [중소기업의 현재]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

- 전체기업 수의 99.9%이면서 고용 81%, 부가가치 65.3% 등을 창출하는 일자리의 원천이자 국가 경제의 근간
- 연간 22만개 이상의 기술창업이 이루어지고 다수 스타트업·벤처기업이 상장시장에 입성*하는 등 미래 성장의 핵심주체로 자리매김

* 코스닥 상장사 중 벤처이력기업 비중 73.6% (벤처기업협회)



□ [다가올 미래] 대내외 환경변화에 효과적 대응이 미래성장을 좌우

-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, 국제 공급망 재편, ESG 규범 강화 등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변하면서 중소기업은 성장위협에 직면

* [EU] 핵심원자재법, 공급망 실사지침, [미국] 반도체지원법,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

- 신산업·디지털 전환 요구 압박에 따른 투자부담, 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 심화 등 구조적 어려움도 가중

* 현재 주력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미래 전망 : 유망하지 않음 52.6% ('24, 대한상의)

** 디지털 전환 적극 추진 여부 : 대·중견 24.1% vs 중소기업 7.4% ('22, KOITA)

⇒ 중소기업과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'선제적 환경변화 대응'과 '중소기업 생태계 고도화'를 이루는 정책혁신이 필요한 시점

※ 현장에 기초한 정책 혁신을 위해 「우문현답 개혁TF」 운영 ('24.1~)

〈 현장의 목소리 〉

□ '우문현답 개혁TF' 운영 현황 ('24.1월~)

- 중기부 장관, 총 60회 (평균 주 4회) 현장목소리 청취 (건의 209건)
 - * 의견 수렴대상 : 일반중소 24회, 창업·벤처 14회, 소상공인 12회, 공통 10회
 - ** 정책건의 분야 : 금융 47건, 제도·인프라 45건, 인력 40건, 수출 26건 등
- 분야별 전문가 (16명)로 구성된 '현장소통 포럼' 운영

□ 주요 정책건의

- ✓ **혁신성·성장성** “중소기업이 지속 증가하지만 재정지출을 무작정 늘리는 데는 한계,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 필요”(연구원 A박사)
- ✓ **사업전환** “기존 주력사업의 성장한계로 신산업에 진출하고 싶지만 자금, R&D, 규제 등 부담이 너무 커 엄두를 못냄”(성숙산업 제조 B社)
- ✓ **인력** “중소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많았지만 비자 문제 등 걸림돌이 많아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어려움”(서비스업 C社)
- ✓ **ESG** “EU 공급망 실사 등 규제의 벽이 높아지나,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”(수출기업 D社)
- ✓ **기업승계** “칠십을 넘어 은퇴할 나이지만, 기업을 받겠다는 자식이 없어 30년 넘게 쌓아온 경영·기술 노하우가 사장(死藏)될 위기”(제조 E社)
- ✓ **창업기간** “지방기업은 직원 구하기도 어렵고 인프라도 열악한데 서울과 같이 창업기업 기준을 7년으로 하는 건 불합리”(지방 스타트업 F社)
- ✓ **글로벌화** “원청 대기업을 따라 미국 현지에 자회사를 만들고 싶은데 해외 법인은 정부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”(제조 G社)
- ✓ **중소 매출기준** “물가는 천정 부지로 치솟았는데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매출기준은 10년째 그대로”(중소기업 H협단체)
- ✓ **평가방식** “번번히 지원사업에 탈락하는데 기술역량보다 재무실적만 보는 것 같음. 정부사업 선정평가방식은 늘상 하던대로임”(ICT J社)

II. 진단 및 평가

1 중소기업 현황분석

□ [성장성]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군이 협소하여 성장사다리 취약

- 소상공인은 95%(약 730만개)로 절대다수이며 증가세이나, 매출 상위권인 소·중기업은 5% 미만(약 38만개*)으로 감소세

* 소기업 27만개, 중기업 11만개 (전체 중소기업 중 730만 소상공인은 제외)

< 기업 규모별 비중 >

구분	소상공인 * 상시근로자 5~10인 미만	소/중기업 * 매출 1,500억원 이하	대·중견기업
2019	94.7%(653.2만개)	5.2%(35.8만개)	0.1%(0.9만개)
2021	95.0%(733.5만개)	4.9%(37.9만개)	0.1%(0.9만개)
증감	+0.3%(+80.3만개)	△0.3%(+2.1만개)	-

*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

- 기업규모가 상향이동*(15. → '21.)된 중소기업은 전체의 1.5%(9만개) 수준으로 대부분 성장 정체

* (소상공인 → 소기업) 5.6만개, (소 → 중기업) 3.1만개, (중소 → 중견) 0.3만개

□ [혁신성] 고성과 창출 '혁신 중소기업' 증가세 미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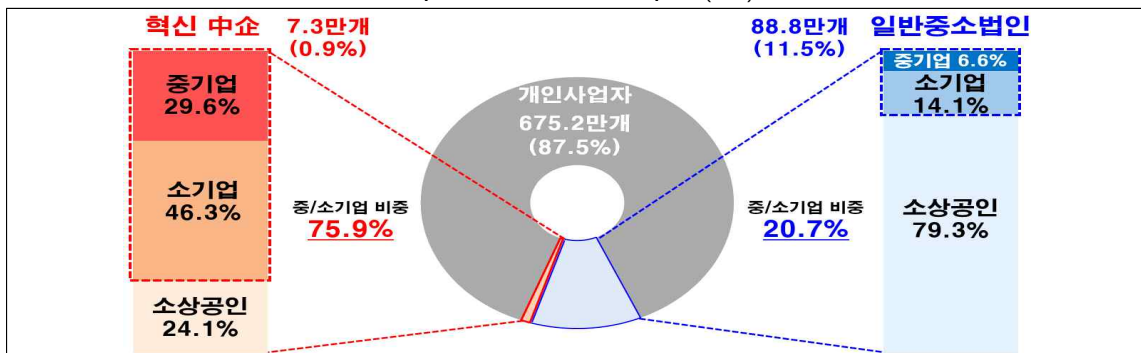
- 매출·고용 효과가 큰 '혁신 중소기업'은 7.3만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0.9% (법인형태 중소기업의 6.9%)에 불과하여 고속성장 기업층이 얇음

* 벤처, 메인.이노비즈, 투자유치, 고성장(3년 연속 매출성장 20%), 제조혁신 고도화 중소기업

- 성장성이 높은 '혁신 중소기업' 증가가 전체 중소기업에 비해 더딘 상황*

* (전체) ⁽¹⁵⁾591 → ⁽²¹⁾771만개 (30.5% ↑) vs (혁신) ⁽¹⁵⁾5.8 → ⁽²¹⁾7.3만개 (26.6% ↑)

< 혁신·일반 중소기업 비교 ('21) >



* 통계청 자료 분석(중기연)

□ [생산성] 대기업 · 중소기업 간 생산성 양극화 확대 추세

- 대기업 대비 中企 생산성은 제조업 1/3, 서비스업 1/2 수준이며 격차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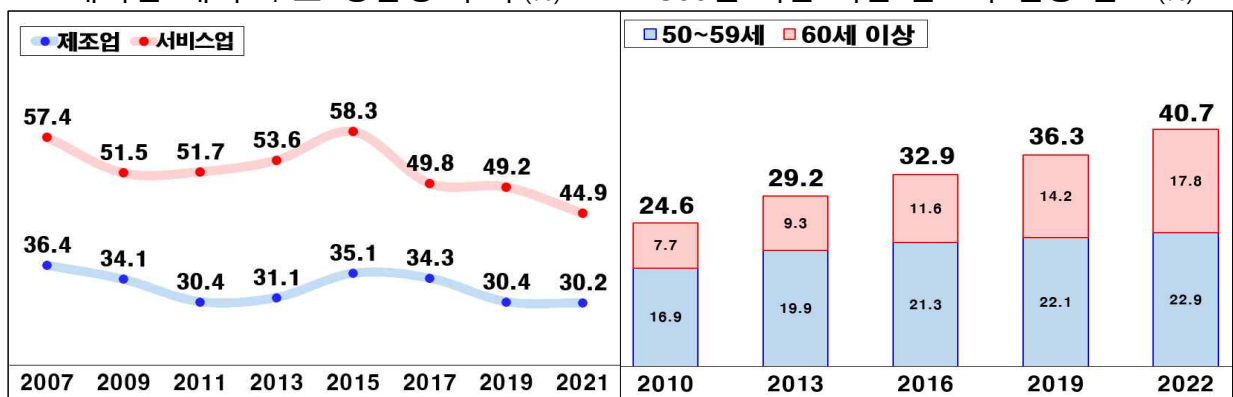
* (제조업) ⁽⁰⁷⁾36.4% → ⁽²¹⁾30.2% / (서비스업) ⁽⁰⁷⁾57.4% → ⁽²¹⁾44.9%

-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의 충격으로 중소기업의 만성적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생산성 저하 지속 우려

* 300인 미만 기업의 50세 이상 근로자 비중(통계청) : ('10) 24.6% → ('22) 40.7%

** 中企 부족인력은 49.6만명으로 대기업 부족인력 4.5만명의 11배 수준('23, 고용부)

< 대기업 대비 中企 생산성 추이 (%) > < 300인 미만 기업 근로자 연령 분포 (%) >



* 한국생산성본부

* 통계청

□ [미래대응] 글로벌 다중위기 대비 미흡

- 미·중 패권경쟁, 자국 산업 보호주의 등으로 수출환경이 악화되었으나 우리 수출은 주요 4개국에 편중 (51%)되어 외부 충격에 취약

* '23년 국가별 중소기업 수출 비중(%) : (중국) 17.2, (미국) 15.3, (베트남) 9.3, (일본) 9.0

- 최근 AI 기반 산업 전환, 디지털 역량 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성장 격차 확대 우려

* 디지털 역량('23, OECD) : 32개국 중 소기업(21위), 중기업(18위), 대기업(15위)

- 탄소 감축 등 국제 규제에 新무역장벽화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미흡

* 중소기업 78.3%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를 알지 못함('23, 중기중앙회)

-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코로나 기간의 저금리로 회귀하기 어렵고, 재정을 통한 지원 확대도 구조적 한계

* 기준금리('22.7 → '24.4) : (美) 2.5 → 5.5%, (EU) 0.5 → 4.5%, (韓) 2.25 → 3.5%

2

지원 정책성과와 한계

□ [성과] 中企 지원 예산은 매출증가 등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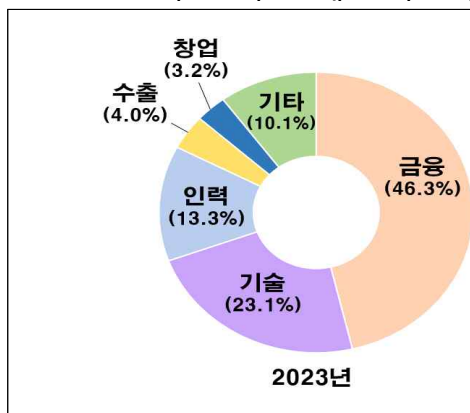
○ '23년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32.5조원으로 증가 추세

* 정부 중소기업 지원 예산 (조원) : ('15) 14.8 → ('21) 29.1 → ('23) 32.5 (중기부, 13.5)
 - 주요 분야별 지원 예산(조원) : (금융) 15.0, (기술) 7.5, (인력) 4.3, (수출) 1.3, (창업) 1.0

○ 지원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전체기업 대비 1.3배 수준이며, 창업기업 생존율은 미지원기업의 2.1배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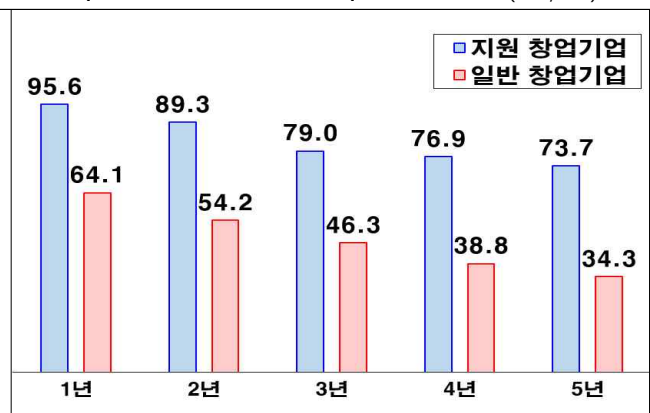
* 매출 증가율 비교('22) : 지원기업 17.2% vs 전체기업 13.6%

< 중소기업 지원 예산 구성 (정부) >



*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분석

< 지원 vs 일반 창업기업 생존율 ('21, %) >



*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조사(중기부), 통계청

□ [한계] 전례답습식 양적 공급 확대

○ 소수 기업을 지원하는 소액 사업(100억원 미만) 비중이 전체의 55%를 차지하고 있으며, 매년 증가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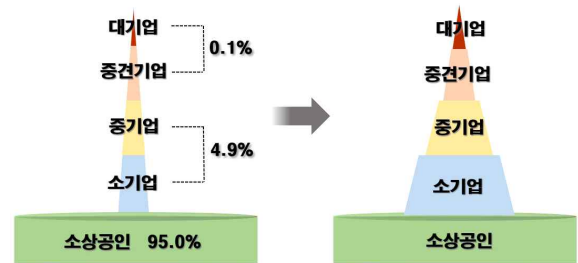
* 정부 100억원 미만 사업 수 ('23) : ('15) 106개 → ('21) 138개 → ('23) 291개
 정부 100억원 미만 사업 규모 비중 ('23) : 전체 사업 수의 54.9%, 예산의 3.9%

○ 다수 정책이 민간·시장 역량을 활용하지 못한 관행적 지원에 그치고, 현장 수요 반영이 미흡

* 민관협력 지원사례(TIPS) : 팁스 참여기업(2,734개사)에 정부지원금이 총 1.3조원 투입 → 13조원의 민간 후속투자를 유치하여 정부지원금 대비 10배 성과

1 성장 촉진 기업생태계 구축

- 소상공인이 95%인 압정형 기업 구조를 안정적 피라미드 구조로 개선시키는 성장단계별 레벨업 지원 강화 필요



2 미래 대비 대응역량 강화

- AI 등 미래 유망 신산업에 도전하여 성장하는 혁신 기업군 육성
- 저출산·고령화,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
- ESG 등 글로벌 규범이 위기가 아닌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개별기업은 물론 대기업-협력중소 간 공급망 단위 혁신 지속

3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글로벌화 촉진

- 수출 촉진 전략을 넘어 글로벌 인재유입, 기술교류, 자본유치 등의 열린 혁신으로 세계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 개편

4 정책의 효율성·효과성 제고

- 소규모·저성과 지원사업은 구조조정하고,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 분석 및 정책 환류체계로 지원 고도화
- 시장·민간이 보유한 선별능력, 협력 네트워크, 자본력 등의 역량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똑똑한 정책지원 체계로 변화

Ⅲ. 정책방향

◆ 중소기업이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경제 역동적 성장의 핵심주체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

추진체계



추진방향

- ① **(혁신성장)** 신산업에 도전하여 성장할 수 있는 혁신역량 강화
 - 유망 中企 신산업 진출 지원, AI 전환 생태계 조성, R&D 지원체계 혁신 등
- ② **(지속성장)**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中企 육성
 - 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, ESG 규제대응, 위기 대응시스템 강화 등
- ③ **(함께성장)** 대-중기 상생형 공급망 혁신, 지역 중소기업 육성, 중소기업-근로자가 함께성장하는 생태계 조성
 - 대기업-중소협력사 간 상생형 ESG 전환 및 글로벌 공급망 대응, 지역특화·주력산업 고도화, 청년 재직자 장기근무 우대 등
- ④ **(글로벌 도약)** '본국 생산, 해외 수출'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개방형 혁신으로 성장토록 유도
 - 글로벌 우수인력 활용, 글로벌 투자유치·기술교류, 글로벌 인프라 구축

혁신 성장

- ① 신산업 진출 촉진으로 성장을 가속화합니다.
- ② 인공지능 전환(AI)으로 미래 성장성을 키웁니다.
- ③ R&D 다운 R&D로 전면 혁신합니다.
- ④ 시장주도로 벤처투자와 M&A를 촉진합니다.

지속 성장

- ⑤ 녹색경제 전환을 기회로 만듭니다.
- ⑥ 선제적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합니다.
- ⑦ 고령화 대비 기업승계를 지원합니다.
- ⑧ 중소기업 기준 개편 등으로 성장디딤돌이 튼튼해집니다.

함께 성장

- ⑨ 대기업과 中企 협력사간 공급망을 혁신합니다.
- ⑩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전폭 지원합니다.
- ⑪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커가는 일터를 만듭니다.

글로벌 도약

- ⑫ 글로벌 인재와 함께 세계시장을 공략합니다.
- ⑬ 글로벌 자본을 유치하고 기술교류를 촉진합니다.
- ⑭ 글로벌 지원 인프라가 촘촘하고 강해집니다.

똑똑한 지원

- ⑮ AI·빅데이터 기반으로 지원체계를 혁신합니다.
- ⑯ 정책금융이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합니다.
- ⑰ 현장접점 규제를 혁파합니다.

V. 주요 추진과제

전략 1 혁신성장

1. 신산업 진출 촉진으로 성장을 가속화합니다.

* 신산업 진출 활성화 방안('24.하), 스타트업 코리아 확산·가속화 전략('24.상)

① [일반 中소] 기존 산업 내 유망기업의 신산업 전환 지원 신규

① 전통산업 내 중소기업이 신산업 진출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'사업전환 제도'를 신산업 중심으로 대폭 개편

* 매출 증가율 : (전통산업) 25.5% vs (신산업 진출) 48.1% (전통산업의 약 2배)

▪ 미래 전략분야*로 진출하는 유망기업을 기술성·혁신성 중심으로 선별하고, 분사·자회사·조인트벤처 등 다양한 진출방식 인정

* 5대 분야(18대 세부산업) : ▲첨단제조, ▲에너지, ▲디지털·통신·서비스, ▲AI·스마트, ▲바이오

< 사업전환 제도 개편 방향 >

	[Old Track] 사업전환('06~)	[New Track] 신산업 진출('25~)
목적	위기 기업 사전적 구조조정을 위한 보편적 업종변경	선별된 유망기업의 신산업 진출 지원, Scale up 촉진
요건	분야 무관 / 전환사업 비중 30% 이상 / 제품서비스 등 최종산출물 변경	신산업 분야 / 혁신·기술성 평가 / 공정, 수익모델 등 기업 가치사슬 혁신

②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간주하여 전용 패키지사업*, 특례** 시설을 통한 종합지원으로 성공을 뒷받침

* 정책금융(융자·보증), R&D, 기술이전, M&A, 투자, 사업화 지원

** 기존 사업 정리과정에서 요구되는 업종유지, 자산처분 제한, 입지 규제의 예외 인정

② [스타트업] 초격차분야* 핵심 스타트업 육성

* 10대 분야 : ▲시스템반도체, ▲로봇, ▲빅데이터·AI, ▲우주·항공, ▲양자기술 등

① 우수 딥테크 스타트업 DB*를 구축하고, 대·중견기업과의 매칭 및 협력을 통한 「스타트업 밸류업 프로그램」 추진 신규

* 現 DB Pool (3천여 개사) : TIPS, 초격차 1000+, 스케일업 팁스, 아기유니콘 등

② 국내의 해외지사 중심 협업을 넘어 글로벌 기업 현지 본사와 직접 협업하는 전략으로 개편하여 세계시장 진입 및 스케일업 촉진 강화

* (오픈AI, 美) 생성형 AI, (다쏘, 佛) 신약 개발·임상, (엔시스, 美) 우주/항공

2. 인공지능 전환(AI)으로 미래 성장성을 키웁니다.

* AI 스타트업 육성 방안('24.상), 스마트 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('24.상)

1 [일반 中소] AI 보급·확산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

- ① 제조현장의 불량 감소, 생산효율화를 위해 AI공정 솔루션*을 보급하는 '지역특화 AI센터'와 권역별 TP·지자체 간 협업 연계 강화 **신규**
 - * ①기계·설비 이상 감지·예측·제어, ②제품 설계 및 생산 계획 최적화 등 공통 모델
- ② 개별설비 중심에서 공장·기업 간 디지털 연결(공급망 관리, 탄소감축)을 위해 제조데이터 표준* 및 가이드라인 정립(~'27년, 500개) **강화**
 - * 77개 대표공정의 500개 핵심장비 데이터 표준화 → 표준 기반 스마트공장 확산
- 제조강국 사례 : (獨) 제조데이터 모델(IEC 국제표준), (美) MS의 디지털트윈 언어 등
- ③ 솔루션 개발, 자율공정 기기 등을 공급하는 스마트 공급기업을 산업적 차원에서 육성*하여 AI·디지털 기반의 가치사슬 혁신 인프라 강화 **신규**
 - * ①'스마트제조 전문기업' 지정 → 역량진단 및 정보제공 → 수요기업 시장선택권 강화
②창업 지원사업 내 스마트 공급기업 육성 별도 지원트랙 신설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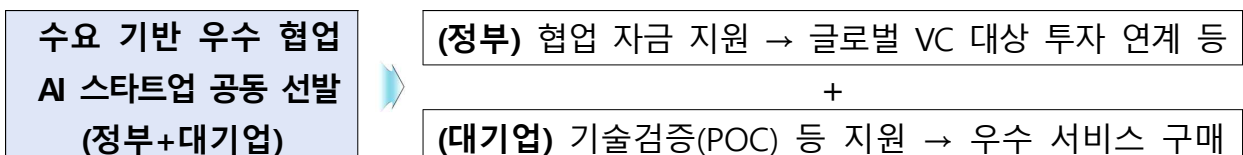
2 [스타트업] 성장단계별 지원, 수요기반형 성장 촉진 **신규**

- ① 스타트업이 강점있는 인공지능 SW개발 중심으로 국내 최고의 AI 스타트업을 선별*하여 성장단계별 집중 지원
 - * (例) 「가칭 K-스타 AI 100」 운영 : 기술수준, 투자유치 등을 기준으로 매년 100개 선정



- ② 국내외 대기업을 수요를 기반으로 우수 스타트업을 공동 선발하고 기술검증을 거쳐 서비스 구매 등을 통한 성장 촉진

< 협업 지원 개요 >



3. R&D 다운 R&D로 전면 혁신합니다.

* 중소기업 R&D 미래전략 방안('24.상)

① R&D 지원의 전략성 강화로 기술혁신 촉진 **신규**

- ① 국가전략기술분야*(Top-down) R&D 지원을 50% 이상(現 약 38%)으로 확대하여 역량초기 기업 일반과제(Bottom-up)와 균형있게 지원

* 12개 분야(과기부) : ▲반도체·디스플레이, ▲이차전지, ▲인공지능, ▲첨단로봇·제조 등

- ② 저변확대형 단기(1년 미만)·소액과제를 감축하고 2년 이상 R&D를 지원하되, 시장·기술전문가의 성과 검증으로 R&D 목표관리* 강화

* 글로벌 인증, 규격, 표준 등 객관적인 목표 제시

② 민간 역량에 부합하는 지원방식 다양화 **신규**

- 일률적인 보조금 지원방식을 탈피하여 역량 초기는 보조금 지원, 역량 후기는 민간자금을 활용한 융자, 투자 지원으로 효과 제고

< R&D 지원체계 개편(안) >

기술혁신역량	입문기	초기	도약기	성숙기
지원방식	선불형 보조	후불형 보조	융자형 R&D	투자형 R&D
재원부담	정부 多	先 기업부담 後 정부보조	시장의 선별을 통한 대규모 민간 자금 지원(정부매칭)	
특징	재무구조가 취약한 초기기업은 정부지원으로 기술역량 강화		R&D 사업화 성공 가능성에 기초한 대규모 시장연계 지원	

③ 공공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실효성 제고(KOSBIR* 개편) **신규**

* 300억 이상 R&D 예산 소관 부처·공공기관의 예산 일부를 중소기업 지원 의무화
- 24개 정부·공공기관 대상, '22년 4조 7,420억원 지원(기관 총 지원액의 18.6%)

- 양적 R&D 목표관리에서 벗어나 기술컨설팅, 사업화 자금 지원, 시범구매 등 기술사업화 성과창출 중심으로 전면 개편

4. 시장주도로 벤처투자와 M&A를 촉진합니다.

* 벤처투자 활성화 전략('24.하)

1. 민간자금 유입 등 안정적 모태펀드 운영 개선 **신규**

1 고액 자산가, 연기금 유입으로 모태펀드 시장 지향성 강화*

* (예) 민간자금의 투자시장 유입을 위해, 모태펀드 우선손실 충당 등 인센티브 검토

2 모태펀드 존속기한 만료* 등에 대비하여 중장기 운영방향 검토

* 모태펀드는 '35년 만료 예정으로, 벤처펀드 운용기간이 8~10년인 점을 감안

3 신생 VC 육성, 글로벌 투자협력 강화 등 투자 생태계 고도화 주력

2. CVC의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개선

1 대기업 등이 조성한 상생협력기금*을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, 동반성장평가와 연계한 인센티브 부여 추진 **강화**

*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액('23) : 3,870억원 (누적 2조 6천억원)

2 CVC 외부자금 모집 제한 완화* 및 해외기업 투자규제 개선** **기발표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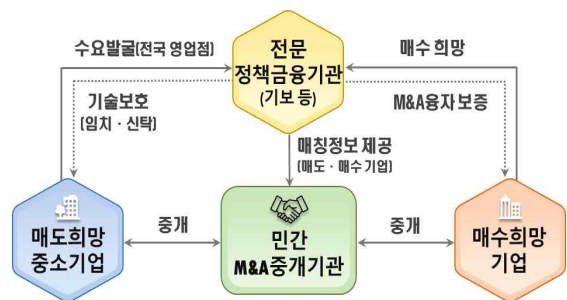
* (현행) 펀드별 외부자금 모집 시 결성액의 40% 제한 → (개선) 50%까지 허용

** (현행) 해외 투자 20% 제한 → (개선) 국내기업에 준하는 해외법인 적용 제외

3. 민·관 협업 中企 전용 M&A 플랫폼 구축 **신규**

1 기업접점을 가진 전문 정책금융 기관(기보 전담조직 등)과 민간 중개 업체가 협업하는 M&A 플랫폼 구축

* (기보) 매도·매수발굴, 기술보호, 자금지원
(민간) 매칭, 협상 등 중개로 수익창출



2 플랫폼을 통해 발굴된 M&A거래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

유형1	유형2	유형3
대기업-스타트업 간 M&A	중소기업 간 M&A	구조조정형 M&A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임치·신탁 등을 통해 기술보호 조치 하에 M&A 거래가 성사되도록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M&A 진행 과정에 대한 컨설팅, 인수자금 및 부대비용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구조조정 자금(펀드, 인수자금 등) 연계, 기업정상화를 위한 자문 등 지원

전략 2 지속성장

5. 녹색경제 전환을 기회로 만듭니다.

*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전략('24.상), 혁신형 인증기업 평가체계 개편('24.하)

1.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지원 **신규**

① EU 탄소국경조정제(CBAM) 대상 수출 상위 中企*에 컨설팅, 탄소저감설비, 글로벌 검증기관을 활용한 국제인증 획득 등 집중지원

* EU 수출 1,850개사의 1/4(그 외 3/4 中企는 CBAM 교육, 헬프 데스크 지원)

** CBAM 대응 인프라, 해외규격인증, 탄소중립 바우처 등 연계지원('24. 154억원)

② 배출량 측정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SW* 개발·보급 등 탄소측정·보고·검증(MRV) 인프라 지원

* 스마트센서 활용, 실시간 계측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배출량 관리

③ 중소기업이 탄소저감용 설비 구축 등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*에 부합하는 대출 희망 시, 우대보증 지원**

* K-taxonomy : 친환경 사업 여부를 분류하는 체계로, 녹색투자에 활용

** 기보 - 8개 민간은행 협업 : 3,400억원 우대보증 시행('24.2~)

2. 미래 대비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편 **신규**

▪ '혁신 중소기업'이 투자유치, 상장 등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벤처·이노비즈·메인비즈 등 인증 평가지표에 ESG 요소 반영

* (국민연금) '15년부터 평가요소에 ESG 반영, (ESG공시) '26년 이후 상장기업 적용

3. 민·관 합동 지원체계 구축 **강화**

▪ 중소기업의 효과적 녹색경제, ESG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, 「민관 합동 中企 지원단」 구성·운영

* 기존 정보공유 차원의 '민간협의회'(운영 중진공) 확대 개편

→ (추가 참여기관) ESG 평가 전문기관, 정책금융기관, 금융기관 등

< 지원 체계 (안) >

민관합동 中企 지원단			
참여 확대 협·단체	참여 확대 中企 지원기관	신규 추가 민간기업·기관	관계부처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업계 지원수요 발굴 맞춤형 ESG 교육·연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ESG 심층 진단 (해외 검증기관 협업) 자금R&D 등 기관 간 연계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ESG 대응 기술공급(기업) ESG 대응 컨설팅(기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ESG 대응전략 수립 ESG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(부처합동)

6. 선제적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합니다.

*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('24.하)

1 조기경보(Early Warning) 시스템 구축 및 긴급지원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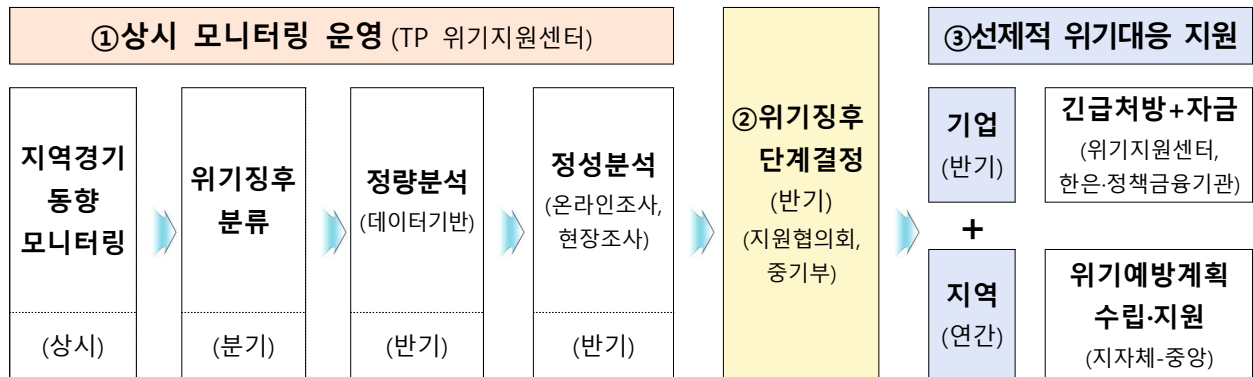
1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및 부실화 징후를 포착하는 시스템 구축* **신규**

* 민간 신용평가사가 보유한 약 240만 중소기업의 신용등급, 휴·폐업 등의 정보 활용

2 위기징후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은행 자금을 활용한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 지원 **강화**

* 한은 지역본부(15개), 지방중기청(13개) 간 협업 지원

<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 구축 체계도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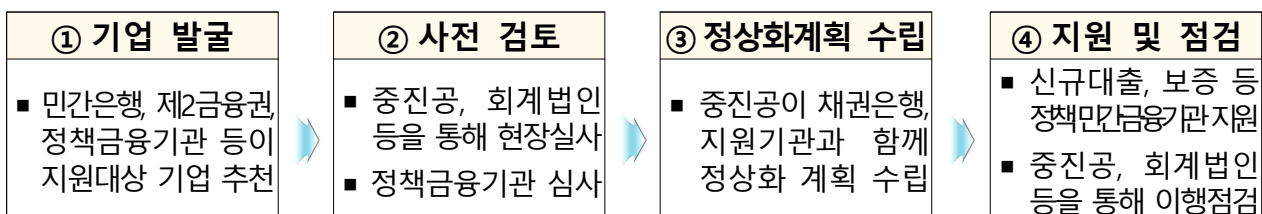
3 대출·회사채 등 약 2천조원 규모인 중소기업 채무 만기구조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는 금융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**신규**

* 만기 6개월 內 비중 분석(%) : ('19.2~7) 36.7 → ('24.2~7) 34.7

2 민간 협업 선제적 구조개선 촉진 (「^가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」) **강화**

- 일시적 재무위기를 겪는 유망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, 기보·지역신보 등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권의 공동 자금지원 강화

* (기존) 중진공, 민간 11개 은행 공동 지원 → (개편) 기술보증기금, 지역신보 등 다수의 정책금융기관, 제2금융권 등이 추가 참여하여 공동금융지원 협의



7. 고품화 대비 '기업승계'를 지원합니다.

*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('25)

□ 「^{가칭}중소 기업승계 특별법」 제정 **신규**

-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, 현행 '가업' 승계(친족) 지원 개념을 '기업'승계(M&A 등)로 확대

* 중소기업 CEO 60세 이상 비중(중기중앙회) : ('12) 14.1% → ('22) 31.6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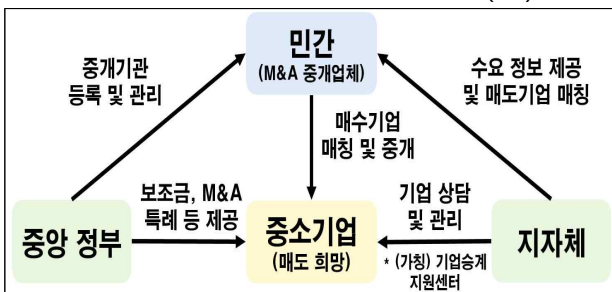
※ 일본, 친족승계 실패 등으로 인한 흑자폐업 위기기업 60만개로 추정(전체 중소기업 1/7)

- M&A 방식의 기업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, 중앙정부·지자체·민간 중개업체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

* M&A 준비, 컨설팅 → M&A 매칭·중개 → M&A 후 경영통합의 쏠단계 지원

** 자녀승계 안할 경우 기업승계 계획('24, 중기중앙회) : 매각 48.6%

< 기업승계형 M&A 지원체계(안) >



< (사례) 일본 지원 체계 >

M&A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승계·인계 지원 Center(지자체) ▪ 민간 M&A 중개업체 매칭(등록, 보조금) ▪ 주식매입비용 용자, 보증
M&A후 경영안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설비투자, 마케팅 보조금 ▪ 투자, 고용 증가 시 세제 혜택

8. 중소기업 기준 개편 등으로 성장디딤돌이 튼튼해집니다.

* 중소기업 범위 개편('25.상)

□ 중소기업 범위 기준의 적정성 점검 (중기기본법 시행령 개정 등)

- ① '15년 이후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매출기준*을 최근 고물가, 산업변화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적정성 검토 **신규**

* 현행기준 : (중기업) 업종별로 400~1,500억원 / (소기업) 업종별로 10~120억원

- ② 중소기업 확인 기간 단축(통상 1~2주), 서류제출*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자동심사 시스템 구축 **신규**

* 30% 이상 지분 보유 기업(특수관계인 포함) 재무제표, 주주명부 제출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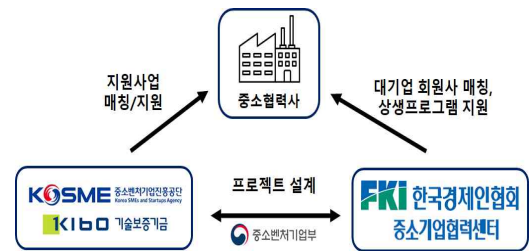
- ③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('24.8, 3→5년)에 맞추어 「조세특례 제한법」 등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특례 적용기간을 확대 **기발표**

9. 대기업과 中企 협력사간 공급망을 혁신합니다.

* 상생형 ESG 공급망 프로젝트 방안(25.상)

1. 상생형 ESG 공급망 혁신 프로젝트 가동 **신규**

- 개별기업 단위의 ESG 전환이 아닌 대기업·협력 中企 간 공급망 전체의 ESG 혁신을 유도
- 대기업은 산업별 특성, 글로벌 규제 등을 고려한 전략 수립, 협력中企 컨설팅* 및 협력사 연계 지원 (상생협력기금 활용)



* (例) '한국경제인협회' 경영자문단 200여명 활용

- 정부·공공기관은 ESG 설비자금, ESG 통합플랫폼 운영 등 상생형 공급망에 대한 맞춤형 지원

2. 대·협력中企 공동 해외공급망 진출지원 **강화**

- 재무능력이 취약한 제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 (공장 구축 등) 할 수 있도록 대·중소 상생 프로그램 도입

* 대·중소 동반진출 사업 내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지원내용 강화 (24)

- 대기업은 생산설비 구축 및 제품 생산 등을 위한 기술 컨설팅, 생산설비 구축 자금(정부 매칭) 등 일부 지원
- 정부는 해외 생산설비 구축, 현지 마케팅·네트워킹, 대·중소 동반진출 보증 우대(기보) 등 지원

3. 공급망 기업 간 「납품대금 연동제」 확산 **강화**

- 산업별(제조·건설 등), 위탁유형별(수리·용역 등) 연동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에너지 비용(전기료·가스비 등)에 대한 연동제 적용 검토

10.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전폭 지원합니다.

*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('24.하)

1 지역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**신규**

- ① 지역 창업 활성화, 성장지원 등을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 인정기간을 최대 3년 연장 검토 (7 → 최대 10년, 약 36만개 혜택)

* 기술창업 비수도권 비중(%) : ('21) 36.2 → ('22) 37.4 → ('23) 39.0



- ② 지역 내 산재된 유사 창업거점*을 정비하여 클러스터 형태로 집적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창업 인프라를 효율화

* (例) 보육기관 통합거점 (가칭) K-창업캠퍼스 구축 : 지역 내 '1인창조기업센터(44개), 중장년기술창업센터(27개), 창업보육센터(258개)' 중장기 통폐합

2 지역 특화·주력산업 고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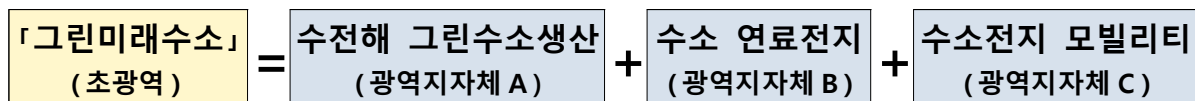
- ① 지자체별 특화산업 전략에 따라 엄선한 지역 핵심기업의 정부-지자체 매칭 지원체계를 고도화한 「레전드 50+」 2.0 추진 **강화**

* 「레전드 50+」 1.0 ('24~'26) : 17개 시도 21개 프로젝트에 정부·지자체 총 1.1조원 지원

** 「레전드 50+」 2.0 ('25~'27) : 특화프로젝트 추가 선정, 연계사업(정책자금 등) 확대 등

- ② 초광역 메가시티형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통해 지역산업 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**신규**

< 초광역 메가시티 규제자유특구 (例) >



- ③ 제조설비가 없는 지역 창업기업(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발굴·추천)을 제조 인프라를 갖춘 테크노파크*에 입주시켜 성장지원 **강화**

* 전국 19개 테크노파크에 총 3,170대의 시험·분석·제조 장비 구축

11.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커가는 일터를 만듭니다.

* 내일채움공제 개편 및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우대 저축 도입('24.하)

1. 중소기업 재직 유인 강화

- ① '내일채움공제'의 가입 기간 다양화, 가입자 혜택 강화 등 중소기업 재직자 수요맞춤형 제도로 개편 **강화**

* 가입목표 (만명) : ('23) 1.2(실적) → ('24) 1.4 → ('25) 2.0 → ('26) 2.5

** 현행 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 및 혜택

: (기간) 최소 5년 이상 ※ 中企 평균 근속연수 3.9년(통계청) 고려 검토
(혜택) 청년내일채움공제+내일채움공제 연계(7년) 시 격려금 400만원

- ②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의 추가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 확대를 위한 전용 저축 통장 (「^{가칭}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우대 저축^{*}」) 신설 검토 **신규**

* 매월 일정금액 불입 (청년 근로자) + 가산금리 우대 (은행 + 中企)

- ③ 개별 추진 중인 '일자리 우수기업' 선정제도를 부처간 통합·운영 하여 우수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, 인센티브 공동 발굴·확대* **강화**

* (例) 「^{중기부}참 관장은 중소기업」 + 「^{고용부}강소기업」 = 「^{가칭}참 관장은 강소기업」으로 통합

** (안) 부처별 각각 부여하고 있는 인센티브를 통합 제공하고, R&D·수출 등 가점 추가발굴 등

2. 일과 가정이 함께하는 기업환경 조성

- ① 근로자 숙소를 도심·주거 지역 등에 설치하더라도 정책금융 지원*, 직장 어린이집 등 가정친화 시설 구축·운영 시 보증 우대 **강화**

* (현행) 기숙사를 사업장 또는 공장 내 설치 시 용자 지원 대상 →

(개선) 청년 재직자 등이 선호하는 교통, 의료·문화시설 지역 등도 지원 대상 포함

- ② 내일채움공제 가입 中企 근로자 등 대상 자녀 영어캠프, 휴가비 지원 (문체부 협업), 휴양시설 이용, 결혼식장 대관 등 복지서비스* 강화 **신규**

* 내일채움공제 운영기금의 수익금을 통해 75,878개사, 157,510명 지원 ('17~'23)

12. 글로벌 인재와 함께 세계시장을 공략합니다.

* 외국인 유학생 활용방안('24.상)

① 외국 유학생(19만)을 중소기업 인재로 육성 **신규**

- 구인·구직 DB 구축, 온라인 인재매칭, 직무교육(OJT형), 취업 연계 및 비자 전환(D2, D10 → E7) 등 일괄 지원

* 유학생 설문조사('23, 중진공) : 88.73% 졸업 후 한국 취업 희망

② 해외 우수인력 유치 및 국내 장기재직 환경 구축 **강화**

- 인도, 베트남 등 해외 우수대학 전문인력 발굴, 수요기업 특화 직무교육 등 국내 수요에 기반한 해외인재 매칭 지원

* 소프트웨어(SW) 인력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여론조사('23,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) : (외국인 인력 채용 의사) 있음 54.5% / (채용 시 선호 국가) 인도 36.4%, 베트남 31.0%

< 외국인력 유입 지원 추진체계 >

구분	외국 유학생	해외 우수인력
① 구인·구직 수요발굴	▶ 참좋은 기업(3만개) 등 구인기업, 취업희망 유학생 등 DB구축 → 온라인 매칭	▶ 현지 대학과 재외공관·거점 지원 기관(GBC, KSC)을 연계 → 취업 희망 인재 발굴
② 직무교육	▶ 지방대학 중심 직무교육	▶ 수요기업 특화형 집중 직무교육
③ 취업연계	▶ 대학 협약 기업 매칭, 권역별 취업 박람회	
④ 취업비자 전환	▶ (공공기관) 평가·심의 추천 ▶ (취업기업) 고용 추천(E7)	
⑤ 자산형성	▶ 내일채움공제 가입 허용	

13. 글로벌 자본을 유치하고 기술교류를 촉진합니다.

① 글로벌 펀드 확대 및 CVC 네트워크 활용

- ① 모태펀드의 해외펀드 출자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 4조원 추가 조성('24~'27) **강화**

* 해외 VC 글로벌펀드 (누적) : ('13~'23) 10.3조원, ('24~'27) 14.3조원(목표)

② 대기업 CVC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CVC 투자 네트워크*를 통해 국내 벤처·스타트업의 현지 IR 및 투자유치 촉진 **강화**

* GCV(Global Corporate Venturing) 컨퍼런스: 매년 미국, 유럽, 아시아에서 개최되며, 구글, MS 등 글로벌 기업이 참여 → 국내 정례화 개최 추진

▪ 글로벌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“K-Global Star” 프로그램 신설 **신규**

* 국내외 VC가 엄선한 벤처·스타트업에 교육·현지 IR 등 해외투자 유치 기회를 지원, 투자유치 시 후속투자 및 글로벌 TIPS, 기보보증 등 연계지원

③ 해외 VC와 ‘글로벌 임팩트 펀드’를 신설하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유망 K-스타트업에 투자 **신규**

② **해외 우수 연구소·대학과 중소기업 공동 협력 R&D 신설 **신규****

①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, 슈타인바이스 재단(Steinbeis Foundation) 등의 보유기술을 활용, 중소기업 상용화 R&D 및 애로기술 해결 지원

② MIT 등 최신기술 보유 대학을 통한 기술동향 분석 및 위탁연구 추진

* MIT 연구 및 기술 동향 보고서 제공, 교수진/스타트업 미팅 → POC 후 위탁 연구과제

14. 글로벌 지원 인프라가 촘촘하고 강해집니다.

* 중소기업 글로벌화 방안(24.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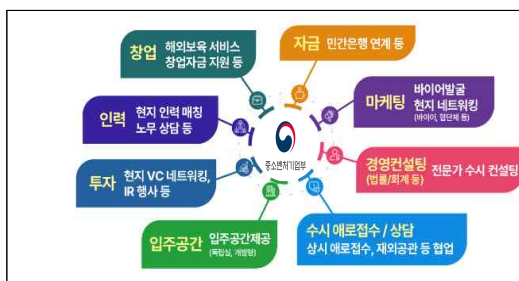
① **민-관 지원기관의 글로벌 원팀 구축 **강화****

① 재외공관, 공공기관, 대기업 지사, 법무법인 등이 참여하여 중소·벤처기업의 현지 애로해소와 정보를 제공하는 협의체 구성

* 원팀 참여기관들이 보유한 시장·통관정보 등 현지정보 공유·제공, 현지진출 지원 등

② 재외공관 등 글로벌 정보 보유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해외 시장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는 ‘Global 센터’ 신설 (수출지원센터·중소연구원 협업)

< 중소기업 글로벌 원팀 협업방안 >



< Global 센터 구축 체계도 >



② 해외 신설법인, 서비스 수출 기업으로 지원대상 확대 신규

① 국내와 생산, R&D 등 협력망을 유지하는 해외 신설법인에게 국내 기업과 동일한 지원 (「중기진흥법」 등 개정)

* (예) 본사는 해외 위치하지만, 한국경제에 고용·부가가치 등 기여하는 경우

▪ 해외법인 정책자금, 바우처, 투자유치 등 글로벌 진출 맞춤형 지원

* 해외 신설법인 수(개, 수은) : ('20) 1,335 → ('21) 1,274 → ('22) 1,406 → ('23) 1,638

② 수출 지원정책 대상을 기존의 제품 수출 기업 중심에서 테크 서비스 기업으로 확대

* ICT 분야 서비스 수출(억\$) : ('20) 81.6 → ('21) 146.7 → ('22) 128.4 → ('23) 139.7

③ 내수기업 및 '혁신중소'의 글로벌 진출 촉진 신규

①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해 '혁신중소' 인증제도(벤처, 이노비즈 등)에 글로벌 평가지표 추가

* 벤처·이노비즈·메인비즈 등 혁신 중소기업 중 수출기업 비중(중복제외) : 26.8% 수준

** (예) 벤처기업 확인 : (기존) 벤처투자·R&D·혁신성장 → (추가) 글로벌 요건 추가
이노비즈 인증 : (기존) 기술성·시장성·사업성 → (추가) 글로벌 항목 추가

< 이노비즈 평가항목 개편(안) >

구분	기술혁신	기술사업화	경영능력	혁신성과	(신설) 글로벌
평가항목	R&D지표 혁신체계 혁신관리	제품화능력 생산화능력 사업화 관리	혁신능력 변화대응 마케팅능력	경영·기술 성과	글로벌 기술력 수출인프라 수출성과

② '글로벌수준 평가제' 도입으로 해외인재 유치, 글로벌 기술교류, 투자유치 등을 평가하여 글로벌 지향성 중소기업 우대

* (사례) 중소기업자리평가(중기부), 성별영향평가(여가부), 환경영향평가(환경부) 등

③ 개도국 경제·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KOICA 사업*을 연계하여, 혁신 스타트업의 현지실증 등을 통한 해외 진출 확대

* **Creative Technology Solution** : KOICA ODA 사업 (3단계, 최대 8억원 지원)

15. AI·빅데이터 기반으로 지원체계를 혁신합니다.

* 오픈형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('24.하),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('24.하)

1 AI 기반 개방형 선정·평가모델 도입 **신규**

- 1 지원 공공기관이 기업·기술 평가모델을 활용하여 기술혁신 역량, 사업화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 지원

* 창업, R&D에 시범적용 후 타부처·공공기관·금융기관 등에 확산

- 2 오픈 플랫폼 형태로 中企에 개방하여 역량수준 진단·개선 지원

* ('24) 오픈형 기술평가모델 구축·시범적용(기보) → ('25) 시스템 전면개방 추진

< AI기반 기업 및 기술평가 시스템 개요 >

기술평가명	평가시스템 개요
기술평가 표준진단모형	기업의 성장가능성·위험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술평가시스템
혁신성장역량지수	기업의 혁신역량 및 미래성장가능성을 평가하여 지수화
원천성 판단모델	보유기술 원천성 등급 및 기술의 위치정보 등을 평가

2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**신규**

- 1 중소기업 지원이력, 기업별 성과(매출·고용·수출 등) 등 중소기업 데이터를 집중관리하는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

* (현행) 매출액, 자본금 등 10종(연1회) → (추가) 업종, 수출신고자료 등 17종(월1회)

- 2 대학·연구기관 등과 협업하여 정책분석 고도화 및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고, 공공마이데이터 형태로 정책정보 개방

3 사업 구조개선 및 지원 형평성 제고 **신규**

- 1 사업 효과성 검토 등을 통해 소액, 성과저조, 집행 비효율 사업 구조조정 (단, 여성·장애인 등 특수사업 고유 목적 고려)

- 2 특정기업의 편중지원* 방지를 위해 부처·공공기관이 지원기업 선정 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사전 스크린

* (사례) A기업 : 3개 부처 R&D 총 10회, 44.7억원 지원('20~'22)

16. 정책금융이 안정적 성장을 뒷받칩니다.

* 신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개편('24.하)

① 신성장 분야, 신규 혁신기업에 전략적 자금배분 확대 **신규**

- ① 신성장 분야*에 투입되는 신규 정책금융 공급 비중을 '27년까지 70% 수준으로 확대(現 53%^{**})

* AI, 차세대반도체, 스마트헬스케어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산업·미래기술 분야

** '24년 신규 정책금융 10.2조원(중진공 5.3, 기보 4.9) 중 신성장 분야 공급액은 5.4조원

- ② 정책자금(중진공)의 절반 이상을 신규 혁신기업에게 공급 ('24. 40% → '27^{목표} 50%), 창업기업 신규 보증(기보)을 40%로 확대 ('24. 34% → '27^{목표} 40%)

② 투융자 복합금융, 지원사업 연계 금융지원으로 성장지원

- ① 후속투자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성장을 뒷받침 **강화**

* 투자조건부 융자(중진공), 투자연계 보증(기보) : 신주인수권 등을 통한 저리 자금 공급

- ② 벤처생태계가 취약한 지방소재 기업 등에 대해 직접투자(전환사채 인수 등) 방식의 융자·보증* 공급 확대 **강화**

* 성장공유형 대출(중진공), 보증연계 투자(기보)

** 비수도권 벤처투자 비중(%) : ('21) 18.2 → ('22) 19.4 → ('23) 26.7

- ③ '창업·R&D' 지원사업과 '정책금융' 연계로 사업화 성공률 제고 **신규**

< (예) 창업·R&D 사업 + 정책금융 연계 프로그램 ('24~) >

구 분	복합지원 내용
창업사업 + 정책금융	· 창진원(창업도약패키지)과 중진공(정책자금)이 공동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별 → 보조금 및 정책금융 종합 지원
R&D사업 + 정책보증	① 기보(Pre-R&D) : 개발기획자금 보증 → ② 기술정보진흥원 R&D 사업 지원 → ③ 기보(Post-R&D) : 후속R&D, 사업화자금 보증 등 쏠주기 지원

17. 현장점점 규제를 혁파합니다.

* 규제 내비게이션 및 창업규제트리 구축('24.하)

1] 규제 내비게이션, 창업규제트리 구축 **신규**

- ① 중소기업 성장으로 업력, 상시근로자, 매출변화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변화, 규제 등을 미리 알려주는 '규제 내비게이션' 신설

* 사례 : 근로기준법 적용(상시근로자 5인 이상), 장애인고용부담금(상시근로자 50인) 등

- ② 신산업 분야 사업모델별 규제를 사전에 점검 및 대응할 수 있도록 '(가칭)창업규제트리'를 제공하여, 기업경영의 예측가능성 제고

2] 불합리한 현장규제 발굴 및 개선 **신규**

- ① 신산업 분야 창업·벤처기업의 혁신성장에 장애*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,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추진

* (예) 투자 유치의 일환으로 전환사채(CB), 상환전환우선주(RCPS) 등 발행 시, 부채 비율 상승 → 혁신 중소기업이 높아진 부채비율로 오히려 정부사업 참여제한
- '23년 공고된 정부사업 267건이 부채비율을 사업제한 요건으로 명시

- ② 13개 지방중기청에 협·단체 등이 참여하는 규제감시단을 설치, 현장이 요구하는 자치법규內 규제발굴 및 일괄개선 (지자체 협업)

V. 향후계획

□ 5대 전략, 17개 추진과제 신속 이행

- 주요 과제별 세부 실천 방안 마련('24년)
- 법률 제·개정 과제*는 22대 국회 개원 후 신속 입법('24.下~)

* (제정) (가칭)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
(개정) 창업지원법, 중기진흥법, 벤처투자법 등

□ 기재부·산업부·고용부·금융위 등 '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TF'를 통해 범부처 협업 정책 추진 ('24년)



중소벤처기업부